

統一教育論

金 弘 明
(朝鮮大 政治外交學科)

‘解放’ 이후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과연 통일로 가는 교육이었던가? 이것이 이 자그만 글의 주제이다. 이러한 질문은 매우 당연한 사실을 묻고 있는 듯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解放’이 결코 해방이 아니었던 것처럼 ‘統一教育’이 또한 통일을 마련하는 교육이 되어 오지 못했다면 이 질문은 우리의 교육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이 오늘의 사회 현실에서 무엇을 기능하고 있는가를 먼저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을 밝혀 보기로 한다.

소위 ‘해방’은 기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상황을 미국 군대의 占領地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 해방의 前夜에서 그리고 미국 군대의 진주가 있게 된 9월 그 어느 때까지 朝鮮民族은 마치도 그들이 처한 식민지 백성의 운명을 ‘해방’의 신화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들었다. 뜨거웠던 해방의 열기와 곧 이어 이를 대체했던 차가운 분단의 현실이 민중적인 열당의 비현실성과 근거 없는 꿈의 귀결을 가르쳐 주었다.

뒤이어 미국의 점령군은 반도의 南쪽에서 미국의 동북아 이익을 보호·확장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1948년에 이르기까지의 3년에 걸친 美軍政期가 바로 그것이다. 軍政의 실시, 그것도 美軍에 의한 統治가 어떻게 우리 民族의 이익을 반영하고 옹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도 지배자인 우리가—그렇다. 우리는 결코 지배자가 되어 본 적이 없는 못난 민족이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위치로 우리의 인식을 가정할 능력마저도 위축되었는지 모르겠다—다른 어떤 지역을 점령했을 때 우리의 가치, 목표, 이익보다도 그들의 것을 수호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혹은 내가 어떤 林野를 사들였을 때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새와 짐승, 온갖 만물을 유념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관리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이를 터무니 없는 비교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땅을 점령한 美軍이 우리 민족과 상의하여 占領하고 우리 민족의 수임을 받아 軍政이라는 어렵고 남을 위한 번거로운 일을 벌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떻든 軍政의 실시와 함께 大學教育의 틀도 마련되었다. 日帝下에서 군국주의 日本의 식민지 지식인을 양성했던 帝國의 大學들이 이제는 分斷 占領軍의 수단으로 다시금 그 모습을 변모해 갔다. 모습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변할 수 없었다. 민족 이익을 옹호하고 발양시킬 주체가 결여된 가운데 대학교육의 목표와 질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아닌 남을 위한 교육에 봉사할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두드러진 분야가 統一의 문제였다. 사실 누구도—40년의 외국 물이 든, 그리고 국제 정치의 실세와 추세를 읽고 있던 이승만을 제외한다면—감히 거부할 수 없는 民族統一의 至上課題가 추상적 수준으로 증발해 버리고 分斷을 더욱 固着化하는 작업을 이데올로기의 水準에서 마련해 갔던 것은 바로 統一의 念願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외쳐댔던 統一教育이었던 것이다.

미군정의 교육 정책은 그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美國의 점령하에 있던 南韓에서 美國의 충실한 수행자이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지배권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승만 정권 아래서 미군정이 골격을 준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6·25의 비극적인 결과는 통일 논의를 정경화하고 결국은 전쟁의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北進統一政策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統一教育도 北韓이라는 적을 섬멸하기 위한 滅共教育이 그 근간을 이루었다.

이처럼 분단 정부 주도하에서 구조화된 ‘統一’의 정책은 실제로는 分斷을 더욱 固着化하고 이의 반사 이익으로서 政權의 長期的 鞏固를 전략삼는 도구로 전략함으로써 통일 정책 그 자체의 부채 내지는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4·19와 뒤이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계승되는 보수·우익의 정권하에서도 統一教育의 內容은 새로운 전환점을 내포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해방’ 이후의 분단 사회가 축성하고 발전시켜 온 사회 관계의 재생산을 담보하려는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래 지속된 5공과 현 정권하에서의 統一政策은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정권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일면 부정적인 듯 보여진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사회 모순의 증폭·격화를 가져온 계층간의 분포 변화—불과 2~3%에 불과한 공업 분야 노동 계층이 이제 25%에 들어섰다—그리고 이러한 물적인 변화를 따라 성장해 온 민중 세력의 강화와 의식의 향상은 '80년대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통일 정책·교육의 사회적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중 세력의 기반 위에서 民族의 利益을 주체적으로 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그 첫번째의 작업은 종래의 統一教育이 지녔던 문제점, 즉 反統一의 觀點을 수정하고 벗어나는 데 있다. 한마디로 統一教育이 統一의 장애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生存 要求인 統一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작업이어야 한다. 한 사회의 지식인은 어떤 특정 계층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계급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지식 계층은 기본적으로 지배 계급의 사회적 보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물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계급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또한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모순이 격화되고 거리가 계급 투쟁의 격전장으로 인식되는 상황하에서 지식인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민족의 진리를 향해, 그리고 민족의 진리에 服屬하는 지식인은 우리 시대의 統一教育에 앞장서야 할 歷史的 召命을 가진다고 하겠다.

*